

# 정책 동향 3호(11/13~11/19) 2017년 11월 20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 주요 동향 >

- ▷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반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는 무시되었다”는 평가와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 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고, 중국은 G2로서의 존재감을 미국은 경제성과를 챙겨 원원했다는 평가에 주목함.
- ▷ 국민 소환제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충돌 문제, 법률적 미비 보완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 보고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으로 법·제도적 정비 필요성 지적 참조 필요함.
- ▷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제1,2당의 기본 입장은 철저히 포퓰리즘에 입각하여 적대적 양당구조 부활을 위해 타게팅하고 있음. 11/16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주장한 안철수 대표의 강연자료 참조용 게재함.

※ ‘싱크탱크미래’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평화재단	외교 안보	한국의 외교안보, 콜롬버스 달걀을 깨 때	3
세종연구소	외교	미중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고찰	3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와 과제	4
입법조사처	정치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6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더불어민주당	재정	일자리·민생·안전 등 국정과제 이행예산 차질 없는 확보	7
자유한국당	재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7
외교부	외교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8

\* 참조자료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덕성여대 강연 보도자료(2017.11.16.) ----- 9쪽

##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 ■ 한국의 외교안보, 콜롬버스 달걀을 깨 때 (평화재단, 2017.11.16.)

#### <요약>

1)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 항모 3개 전단은 한국 및 일본과 공동 군사훈련에 착수했다.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한국 해군과 3개의 미 항모전단이 공동훈련을 한 것은 창군이후 최초의 일이다. 3개의 미 항모전단과 함께 각각 10여척에 달하는 이지스함과 LA급 핵잠수함이 동원됨으로써 한반도 인근해역은 가공할 만한 미 군사력의 집결장으로 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도출된 것도 아니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지도 않은 셈이다.

2)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반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는 무시되었다는 점...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관철시켰다...그 영향의 범위가 중국을 포함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한.미는 전략무기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3)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는 그 규모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10.31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국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여지를 남겼다. 한국이 밝힌 '3NO' 즉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표명은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수단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만으로도 자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한국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할 과제들이다.

5)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필요도 있다. 미.중 간의 동북아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어느 한편으로 경사될 경우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은 심각하게 요동치게 될 것이다...한국의 국력은 고래싸움 속의 새우가 아니라 적어도 천평칭위의 추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SvADCF>

#### ■ 시사점

1)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반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는 무시되었다”는 평가에 주목함.

2) 또한 미.중간 전략적 균형 속에서 등거리 외교적 접근은 아니지만, 국익 수호를 위한 주도적 외교력이 절실하다는 평가 또한 짚어야 할 부분임.

### ■ 미중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고찰 (정재홍, 세종연구소, 2017.11.13.)

### <요약>

1)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중국은 미국과 상호 윈-윈의 신형 대국관계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실리를 챙겼다...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는 대규모 미국산 물품구매, 경험확대 등으로 미국의 불만을 달래주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견지 및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우회적으로 고수하며 미국의 강한 요구와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2)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해결을 주장한데 반해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중단)및 쌍궤병행(雙軌.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 결국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문제에 대해 상호간 입장 차이와 인식격차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합의 수준에 그쳤다.

3)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줄곧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불공정 거래,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중국과 2,535억불(약 280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및 구매계약, 시장 추가개방 약속, 미중경협 계획 발표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와 이득을 챙겼다.

4)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중국 중심의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포한 이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중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에 있어서도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나 단독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해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kYgNJS>

### 시사점

1)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 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고, 중국은 G2로서의 존재감을 미국은 경제성과를 챙겨 윈윈했다는 평가 가능함.

2) 또한 중국식 북핵 해법이 적용될 경우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 필요함.

## ■ 금강산관광 19주년의 의미와 과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7.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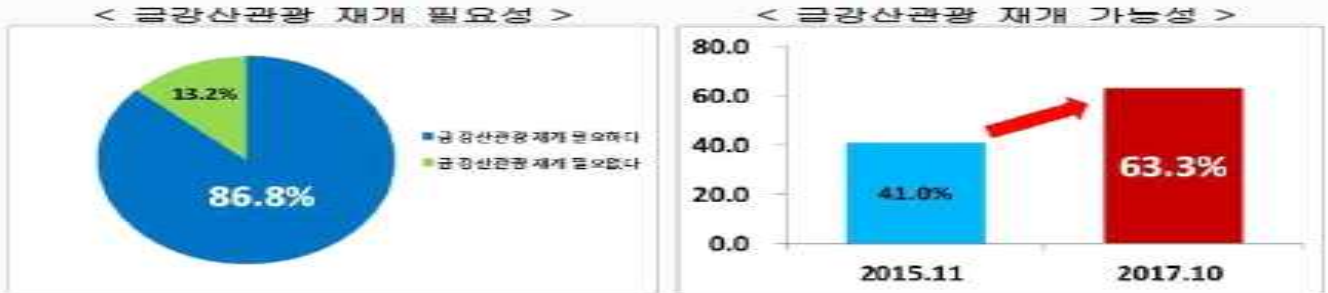
### <요약>

1)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다수의 전문가들(86.8%)은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0.8%)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전문가의 90.8%가 금강산관광의 의미는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라고 응답했으며...현 정부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2015년에 비해 긍정적

응답(2015년 41.0%→2017년 63.3%)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귀하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의 응답이 ‘낮은 편’에 비해 26.6%p 높음. 이전 조사인 2015년에는 부정적 응답 비중(58.8%)이 높았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63.3%)이 부정적 응답 보다 높음. 정치 성향별 재개 가능성을 살펴보면, 중도가 69.7%로 가장 높았고, 보수의 경우도 절반 수준인 48.2%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원문 읽기> <https://goo.gl/DhVhrx>

### 시사점

1)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금강산 관광의 순기능(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 긍정적 평가 참조.

###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김선화, 입법조사처, 2017.11.14.)

#### <요약>

1)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영국에서 국민소환법을 제정한 것은 2009년 하원의원들의 지출스캔들 때문...하원의원의 국민소환사유에 대해서 국민소환법은 매우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첫째, 하원의원이, 의원이 된 후에 영국 내에서 형사문제로 기소되어 자유형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둘째, 하원의원에 대한 의원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하원이 일정기간 이상의 의원직 정직을 명령한 경우...등...당해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청구에 서명하면, 그 하원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해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국민소환제의 쟁점은...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건 비례대표로 선출되건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현대의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부분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소환이 이러한 자유위임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은 소환의 사유에 포함할 수 없고,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그 소환사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4) 영국의 소환사유를 본다면, 의원의 윤리에 관하여는 지금과 같은 규칙이 아니라 상세한 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국민투표규정의 내용으로는 국민소환제와 체계불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시에는 이를 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VpvA25>

### ■ 시사점

1) 국민 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충돌 문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 등을 설명한 보고서임.

### ■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김정선-황은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1.13.)

#### <요약>

1)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0~14세)인구를 앞지르며 700만 명을 돌파해 고령 사회(14% 이상)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접어들게 됨...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안전한 식품 선택과 영양 공급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커짐.

2) 노인의 영양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영양상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시설 노인이 아닌 노인 부부였고,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가 가장 나쁨. 노인 부부 가구에 비해 독거노인은 주로 혼자 식사하기 때문에 조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져 결식이나 편식을 하는 일이 잦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워 식사를 미루는 편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식재료 관련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식재료비는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충당됨...자립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식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외식을 할 수 있으나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대부분 급식업체로 부터 식품을 배달받거나 시설에서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음.

4) 법·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2조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급식서비스”로 개정하여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식사·영양서비스를 재가요양서비스의 급여 항목으로 확대...국민 의료비 절감,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노인의 식생활 특징별로 맞춤형 식사서비스를 제공

<원문 읽기> <https://goo.gl/CDy1e9>

### ■ 시사점

1)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특히 노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2) 특히 향후 베이붐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은 당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임.

##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 일자리·민생·안전 등 국정과제 이행예산 차질 없는 확보 (더불어민주당, 2017.11.6.)

### <요약>

1) 2018예산안의 심사의 기본 방향은 △국정과제 이행 예산(17.8조원)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 △문재인정부 성장 전략의 한축인 ‘혁신성장 동력 예산’ 추가 보완 반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숙원사업 예산의 경우 재원여건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 세입예산안 원안 통과로 세입의 차질 없는 조달 및 재정건전성 확보

2) ‘일자리 민생 안전’예산의 쟁점 및 진실... ① 공무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생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충원 -> 17.4만명 충원 완료 후에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 전망

② 최저임금 인상 관련...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용위축 가능성 등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자유한국당이 추계한 총 40조원 소요는 5년간 지원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당해연도 지원액을 누적 계산하여 추계한 것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평생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소요는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변화, 고령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였음(‘17~’22년간 30.6조원)

④ 기초 연금 인상 - 기초연금 인상은 5당 공통공약

⑤ 아동수당 도입은 5당 공통공약으로서, 정부안을 포함한 10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

⑥ 시민단체 등 지원...동 예산은 누구에게 지원할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이며, 공모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것임

⑦ 남북협력 사업...2018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박근혜정부 시기에 편성한 2017년 기금안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도 ‘17년 2,200억원→’18년 1,200억원으로 축소. 남북경협 사업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이며, 철도연결 등 남북경협 사업은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에 사용되므로 현금 유입이 될 수 없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적 성격으로 퍼주기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임.

<원문 읽기> <https://goo.gl/bKjREs>

### ■ 시사점

1) 일선 소방관 확충 등의 민생과 직결된 경우가 아닌 무분별한 공무원 충원 문제, 최저 임금 1만원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나 EITC 연계강화가 아닌 안정자금 지원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 화이트 리스트에 의한 시민단체 지원으로 인한 관변화 우려 문제는 짚어야 할 지점임.

##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2017.11.14.)

### <요약>

1)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나라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감액 원칙**...첫째,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둘째,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셋째,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계획수정이 불가피...넷째, 불법시위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다섯째,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여섯째,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예산은 감액.

2) 증액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예산을 증액...둘째, SOC 예산을 정상화하여 서민, 지역 경제를 활성화...셋째, 경로당에 기존 냉난방비.전기료.쌀에 더해 냉온정수기를 공급해드리고, 청소도우미를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을 보다 편안히...넷째, 홀대 받는 농업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여 민생 경제를 돌보겠습니다. 다섯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전액 삭감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을 정상화하여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 세법과 관련하여...첫째, 법인세는 65만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2억원 미만 구간은 10%에서 7%로 인하하고, 2억원에서 200억원 구간은 20%에서 18%로 인하...둘째, 유류세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인하하고, 담뱃값도 1갑당 2,000원을 인하

<원문 읽기> <https://goo.gl/8juKmq>

### **시사점**

- 1) 국가재정에 대한 감액과 증액과 관련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적대적 양당구조 부활을 위해 타계팅하고 있음.
- 2) 감액과 증액 원칙에 있어 일부는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세법관련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는 철저히 말 바꾸기와 포퓰리즘에 입각하고 있음.

###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 2017.11.14.)**

#### **<요약>**

- 1) ‘17.11.13.(월) (뉴욕 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휴전 결의\*(제목: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컨센서스(무투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2) 특히, 금번 결의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전문 13항)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개발, 관용,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이 포함됨.

<원문 읽기> <https://goo.gl/ZckgZC>

### **시사점**

- 1) 한미정상 회담에서도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합의한 연장선상에서, 유엔총회에서의 휴전 결의는 진전임.



## 정치개혁과 한국정치의 재구성

- 합리적 개혁세력의 연대/통합의 빅 텐트를 치자 - <https://goo.gl/rMBH2d>

### 1. 촛불 이후 한국정치는 바뀌고 있는가?

○ 촛불민심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심판하고, 기득권 세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청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희망이다.

- 촛불정신의 실현은 과거 적폐 청산과 함께 민생경제,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민통합, 정치 협치 등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다.
-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정국운영의 키워드는 사정기관을 동원한 적폐청산이다.
- 기업과 시장의 혁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문제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 복지 증대와 공공부문 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라는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해 낼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이고 경제성장의 동력도 기업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기대했던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더욱 심해졌을 뿐 진전이 없다. 한반도 운전석론과 균형외교를 주장했지만 중국의 입장(사드추가배치 불가, 미MD체계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미국의 입장(무기구매, 방위비분담, 한미FTA 개정)에서 줄타기 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한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대결프레임으로 기득권 양당체제로의 회귀 양상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적폐청산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개혁작업의 일환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면 뒷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질질 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반드시 빌미가 생긴다.
- 상처가 깊으면 덮기보다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보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보수의 생명은 책임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로 갔으며 최순실 사건에서 보여준 부패와 국정농단은 국정운영세력으로서 기본을 상실했다. 보수는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되지 않은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 불행히도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기득권 정당간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 지금 한쪽은 촛불민심을 앞세운 개혁세력, 다른 한쪽은 정치보복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충돌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세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그렇게 싸울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
- 양당의 걸림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다. 그래서 이들은 양당구도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적폐청산 논쟁이 전선의 중심에 서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양당구도이다.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구도를 만들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양자구도란 합리적 개혁세력인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눈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구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2위 정당을 유지하고 3,4위 정당이 각각 지리멸렬해 있으면 선거승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세력을 평정하고 자유 한국당을 제치고 제2당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개혁 대 합리적 개혁의 대결이고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선거는

영남을 평정하고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측불허가 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피해자 프레임은 양당구도를 노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양당구도만 되면 문재인정권이 언젠가는 실수와 실패의 길로 갈 것이고 그 경우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이익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확신한다.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3,4당은 눈에 가시이다. 이들이 없어져야 반문재인 전선의 대표성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것도 민주당과 같다. 국민의당이 제3지대를 평정하여 합리적, 개혁적 보수세력을 흡수하여 자신들을 누르고 2위 정당으로 부상하는 경우이다.

- 결과적으로 적폐청산 정국은 양당의 진영 헤게모니와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논쟁과 대결은 양자회귀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당 위상과 존재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 2. 한국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재구성할 것 인가?

○ 기득권 양당세력이 양당구도 회귀를 획책하는 한 정치개혁은 없다.

- 지난 30년간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에 기반 한 양당구도가 한국정치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퇴행적이고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한국의 양당정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앞으로 개혁이다 보복이다 하면서 양당이 이전투구 한다면 경제는 죽고 민생은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과 표만을 향한 죽기살기식 싸움과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정치개혁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의 정치, 상대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칠 것이다.

- 다당제 정립을 통해 기득권 양당구도를 해체하고 각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경쟁을 견인해야 한다. 다당제가 정착되면 기득권 세력 간의 밀실담합정치나 적대적 공생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정치는 투명해지고 정략보다는 정책경쟁의 정당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개혁과 정치발전이 당연히 뒤따른다.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제3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제3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 정치개혁과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첫째, 이념과 진영이 아닌 문제해결 중심의 중도정치 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

- 양당구도의 핵심 축인 진영과 이념논리로는 중충화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난제들을 풀어갈 수 없다. 실사구시와 실용적 문제인식과 접근이 아닌 이념적 사고와 접근은 정파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구시대 유물이다.

- 포퓰리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세금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 비대화와 기득권화를 촉진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천적 중도 정치세력만이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정치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영남과 호남이 아닌 영호남 중심의 동서화합, 진보와 보수의 한쪽 날개가 아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양 날개로 날겠다는 탈이념, 융합적 사고를 가진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구 정치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우선

적 과제이자 핵심과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정운영방식과 한국 정치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득권세력의 유지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는 세력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줄 것이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득권 정당구조를 깨고 소수 약자세력의 정치진출을 도울 것이며 정당 간 치열한 정책경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양당구도 회귀저지를 위한 연대와 통합(정치구도재편)이 필요하다>

- 제3세력이 3, 4당으로 분리되어 있어서는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다. 양당구도가 되면 3, 4당은 선거에서 희망을 갖기 어렵고 거대 기득권정당으로의 흡수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한국 정치는 다시 구체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기득권 양당정치, 이념과 진영의 낡은 정치에 반대하는 제도 정치권 안과 밖의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현재의 정치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 양당구도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1, 2당을 위협할 때 정치의 변화는 시작된다. 양당구도에 반대하는 것은 양당구도를 인정하고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당을 추월하여 정치구도 자체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대와 통합으로 합리적 개혁세력의 빅 텐트를 치자.

○ 정치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 1당이나 2당으로 위로 도약하지 못하면 제3당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상황 속에서 제3당은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제3당은 집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선과 대선은 정권심판이나 계속 지지냐? 정권연장이나 교체냐?의 집권가능성 프레임으로 치루어져 왔고 유권자의 선택은 항상 1당과 2당으로 귀결되어 왔다. 과거 국민당과 충청기반을 가졌던 자민련이 그렇게 소멸 됐다.

-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기적을 일구어냈지만 대선에서 실패함으로써 다시 양당구도에 짓밟힐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쳐 2당으로 성장하고 1당을 제압하는 것은 전략적 상식에 속한다. 2당으로의 성장은 집권가능성을 갖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철옹성 같던 양당구도를 깨고 기적을 일구어냈다. 20년만의 다당제 실현으로 밀실정치와 싸움국회를 막아내는 등 국회개혁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은 다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와 생존기반을 만들지 못할 경우 거대 기득권정당구도로 흡수 소멸될 것이다.

- 기득권 양당구도도 깨고 당도 생존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 거대 양당이 가장 싫어하는 일, 이것이 연대와 통합의 길이다.

○ 제3세력이 1당이나 2당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혁명이고 개혁이다.

-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정당이 1당이나 2당이 되고 유력한 집권가능 정당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명이고 개혁이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지고 정치문화도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다.

- 다행히도 지역의 열망을 존중하며 영호남 대통합의 길이 있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중도정치로의 열망이 있다. 대통합과 중도정치 실현의 열망을 담아 양당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

<끝>